

2580억원 이미 계약...16년 논쟁 이젠 끝내자

도시철도 2호선 찬반 재논란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찬반의 배경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할 만큼 '효용성'이 있는 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또 운영 적자와 부채를 감당할 만한 광주시의 재정력도 논쟁의 한 축이다.

찬성 측은 도시철도 1호선의 보완재 성격인 2호선을 통해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공공교통의 적자를 줄이고, 승용차 사용을 억제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단순한 수입-지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 측은 저심도 지하철보다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노면전차, 간선급행버스시스템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에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 찬성 측은 검증이 안 된 노면전차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 소모가 불가피하고, 변경에 따른 매몰 비용 500억원 발생, 지역 내 논란과 갈등 초래 등의 부작용으로 사실상 2호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저심도 지하철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국비 지원도 불투명하다.

◇16번째 찬반 논란만 반복·행정·재정력 낭비=도시철도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게 된 것은 지난 1994년 11월 광주도시철도 노선이 당초 5개 노선 102.65km로

贊 “공공교통시스템 혁신” 反 “투자 대비 효용성 따져봐야”

16년간 행정·재정 낭비 막대...재검토엔 사실상 사업 포기

계획됐기 때문이다. 이후 1호선(소태~월전) 20.2km, 2호선(송암~문화) 13.7km만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3개 노선은 2001년 재검토하기로 했다가, 2002년 11월 1호선 동서선(용산동~옥동) 20.1km, 2호선 순환선(효천역~백운광장) 27.4km, 3호선 남북선(백운광장~첨단산단) 20.3km 등 3개 노선 67.8km만 추진하기로 했다.

2호선은 2003년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2004년 예비타당성 조사도 비용편익분석(B/C) 1.42로 통과했지만, 노선과 국비 지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착공이 연기됐다. 2011년 11월 3호선이 사라진 대신 2호선이 지상고가 방식 확대순환선(41.7km)으로 변경돼 승인·고시됐는데, 지상고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2013년 12월에는 저심도지하 방식(41.9km)으로 다시 바뀌었다.

민선 6기인 2014년 7월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2016년 2월 '100인 시민위원회'에서 재추진을 결정, 같은 해 12월 30일 광주시가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했다.

◇2호선 관련 2580억원 이미 계약, 254억원 집행=민선 6기 들어 2014년 7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전면재검토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원안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저심도 건설에 따른 안전성, 기술적인 문제, 재정여건 등에 대한 전문가 TF팀 운영, 자문, 시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16년 1월 원안대로 2호선 건설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국토부와 기본설계 용역, 총사업비 협의 등도 완료했다.

2호선 1단계 구간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공정을 80.7%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2단계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공정을 4.7%다. 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되는 차량도 지난해에 조달발주해 2017년 10월 고부차량으로 계약 체결돼 설계·제작중이다. 2호선 건설 관련해 지금까지 계약된 금액은 총 2580억원이며, 이 중 254억원이 집행됐다.

◇수완·일곡·첨단·온남·상무·금호 등 외곽 41.9km 순환=동서로 광주를 관통하는 1호선과 달리 2호선은 상무역과 남광주역에서 1호선과 만나며 광주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구조다.

연장은 41.9km로 국비 1조2347억원 등 2조579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는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정거장 20개소, 차량기지 1개소) 17.06km로 2023년 개통 예정이다.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온남지구-시청(정거장 18개소) 20km로 2024년 운행을 시작한다. 마지막 3단계는 백운광장-진월-효천역(정거장 6개소, 주차기지 1개소)을 연결하는 4.84km로, 2025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고 '쌈짓돈', '논민돈' 비판이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이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닫혀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문 앞을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특활비는 '제2의 월급' 각종 구실 만들어 나눠먹기

2011~2013년 240억원 집행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원 상임위원장 600만원씩 챙겨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국회가 각종 항목을 만들어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모두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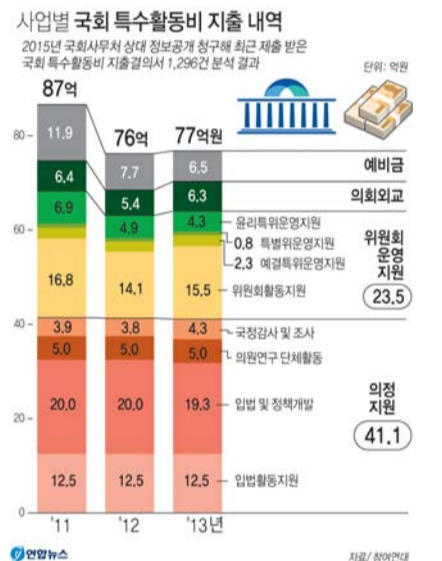
국회 특수활동비는 ▲의정지원(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22억~27억원) ▲의회외교(5~6억원) ▲예비금(6억~11억원) 등으로 쓰였다.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000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월 600만원씩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가 주어졌다.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만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매달 1000만원씩 추가 지급 받아 간사 100만원, 위원들 50만원, 수석전문위원들 150만원씩 나눠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타갔다.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위는 드물게 열리는 데도 매월 돈을 지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예결특위는 비정기적으로 78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0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이 받아갔고, 윤리특위는 정기국회마다 대책비로 300만원, 위원회 활동지



원비로 7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달러,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기 청와대 비서관 광주·전남 출신 발탁 주목

내달 초 비서관 개편 앞두고 지역인사 과감한 인선 목소리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서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의 발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에서 수석급 이상 15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임종석 비서관(장흥), 장하성 정책실장(광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순천),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나주) 등 4명이다. 여기에 전북의 한병도 정무수석(익산)과 운영총괄 국민소통수석(전주)까지 포함하면 전남 출신은 6명으로,

전체 수석급 이상에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또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행정관은 광주·전남 출신이 파견 공무원까지 합쳐 30여명 수준으로, 지역별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 48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과 유승화 제2부속 비서관,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다. 신정훈 전 의원이 농어업 비서관을 맡기도 했지만 6·13 지방선거 출마로 사직했다.

청와대 비서관은 사실상 각종 국정 현안의 실무적 책임을 맡고 있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을 직접 경험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인물을 키우는 최단기 코스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2기 비서관 인선에서는 능력이 검증된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을 보다 과감하게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출향 인사 보다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사들이 중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수석 비서관과 행정관에 비교하면 비서관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청와대 호남 인맥은 과거 그 어느 정권에 비해 강하고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결같은 믿음, 좋은 시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스마일장비 2대 운영
- Best Skilled 닥터 선정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신세계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